

**FTA 피해 지원 1조원 늘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농수산업 환경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2008~2017년 재정 지원 규모가 기존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수해 대상을 시설이 취약한 모든 전업농(1만2,000가구)으로 확대했다. 또 과수시설과 시설원예도 각각 2,000억원씩 늘어난 6,000억원과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APC) 건립을 지원하고, 무병묘목 생산·보급에 8~1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했다.

쌀과 보리의 대체작물로 청보리와 같은 조식료 생산을 늘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대체 소득작물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식료 재배면적 규모를 연간 32만ha 수준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2012년 6월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1t 미만 농용굴착기와 화식(火食) 사료배합기를 추가했다.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제도(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로 하는 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율 적용기간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에 동력양기기 부속작업기인 벼 직파기, 축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등 5종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 재배용 배지 및 화분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가단위 소득 안정직불제'를 계획대로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설현대화 자금과 관련, 정부는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구조 위주의 보증심사를 개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FTA 대책의 뼈대가 됐던 축사·과수·원예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입계 물가정책 부담... "농가 먼저" 눈치만**

기본원유가격이 130원 인상됨에 따라 유업체들이 이를 시유 등 유제품 가격에 반영시켜 유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제품 뿐만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업계도 우유가격이 인상되면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업체들의 고민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유업체들 역시 기본 원유가격 인상을 계기로 제조경비 등을 함께 반영시켜 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300~4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무한정 제품값을 올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원유가 인상 이후 제품값을 올리면서 유업체들간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서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업체들도 이번에는 어느 업체가 먼저 얼마나 올릴지 예의 주시하며 제품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우유가 물가관리품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유가 필수 식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물가당국 역시 유제품값 인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기본 원유가 인상 이후에도 제품값 인상을 최소화해 줄 것을 유업체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업체들도 마냥 눈치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본원유가 130원 인상만으로도 연간 1천380억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원유가와 함께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가 47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기본원유가 인상 이후에는 매년 집유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2008년에는 기본원유가격이 584원에서 704원으로 인상된 직후 유업체들이 인상분을 제품값에 반영시키면서 1,800원(1ℓ) 수준이었던 것을 2천180원으로 기본원유가격 인상액의 2배 이상을 올렸다.

**저실 뒤편에는 판촉...우유대리점 1년만에 빛 1억**

우유 대리점 1년 운영해서 빛만 1억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1사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는 장 모(32)씨의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우유 유통에 뛰어들 장 씨에게 돌아온 것은 1억원의 연봉이 아닌 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채무 뿐였다. 대리점 매매를 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고 있다는 그는 우유 유통 구조의 피해자였다.

1사 분당 영업소 대리점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최근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본사는 1년 단위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판촉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다. 계약해지를 당한 이 대리점주는 자신의 거래처 300가구를 800만원이라는 험값으로 다른 대리점에 넘겨야만 했다.

우유 대리점의 열악한 환경은 우유 유통의 구조적인 원인에 근거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유 유통은 우유 업체의 공급가격에 대리점마진, 배달원 마진을 포함해 소비자 가격이 되지만 과도한 판촉비로 일부 대리점에서는

역마진 등으로 폐점사태를 겪고 있다.

A사 B우유 930ml는 월 9개 기준으로 소비자가격 2만 250원(1리터당 1400원)에서 배달원 마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리점 마진이 3150원이다. 대리점 마진에 판촉비는 제외다. 대리점주들은 "판촉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1ℓ(1가구당 한달간 받는 우유량, 보통 1리터 4개)당 판촉비로 2500원이 드는데 본사 1만2000원, 대리점 1만 3000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사은품으로 대리점은 1가구당 3만5000~5만원선을 지불한다. N사 대리점은 2008년 사은품비용 1만5000원선여서 현재 2배이상 폭족한 셈이다. 더구나 대리점은 △판촉사원 1인(시음우유 30~50개)당 1만~1만 5000원 △보냉주머니 2000~3000원 △여름에 사용하지만 회수되지 않는 얼음팩 약100~150원 △판촉사원 일비 1인당 1만원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촉은 법적으로는 불법이라 대리점은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소비자가 1년계약으로 사은품을 받아가서 3개월 후 중지하더라도 대리점은 위약금을 받기 어렵다. 대리점의 적자가 나지 않는 손익분기점은 계약 6개월 이후여서 이른 계약 해지로 대리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미수도 높아 대리점은 그야말로 삼중고다. C사 모 대리점의 경우 평소 미수가 60%에 육박한다. 일일이 방문하고 납부를 독촉해도 미수율이 30%에 달한다. 10%는 말 없이 이사를 가버려서 대리점 부담으로 남게된다.

대리점이 폐업하게 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판촉비 등이 들어가는 우유 유통구조 개선은 쉽지 않다. 대리점주들은 우유업체 본사차원에서 의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리점주는 "선물이 없으면 홍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실제 원유가격보다 유통비용이 3~4배가 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대리점주들은 성토했다. 정부가 관리감독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지난 7월 31일 N사 우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이 모(45·남)씨는 "터무니없는 판촉비 부담에 공정

거래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우리같은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의 악순환이 우유 유통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같은 회사 대리점인데도 가격차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농가는 시장 논리가 아닌데 유통과정에서는 과도한 판촉 등의 시장논리가 적용돼 같은 회사 대리점인데도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유업체측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4+1 정책만으로도 25% 가량의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일선 대리점들의 손실을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유업계 4사 대표 '호출'**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주요 유업체 대표들을 '호출'했다. 8월 25일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주요 유업체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 26일 오후 6시 전 농식품부 청사에서 서 장관과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자고 통보했다.

농식품부의 '호출'을 받은 유업체는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유업계 '빅4'를 포함해 5~6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물가안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부르는데 안갈 도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서 장관이 주요 유업체 대표들을 불러모아놓고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유 소비자가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낙농진흥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낙농농가가 우유업체에 납품하는 원유가격을 1당 13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우유 소비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태다. 유업계는 원유값 인상분을 일선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이를 소비자에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원

유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업계가 소비자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권유'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업계가 정부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적어도 추석 연휴까지는 우유값을 올리진 않겠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업체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료영세율 적용, 2014년까지"**

사료영세율 적용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합동으로 FTA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부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축산부문에서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규모를 현행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 되도록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한다. 보증심사 방법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에서 농업경영체의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

이와 함께 올해 12월 31일로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기로 했다. 통상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말에서야 결정됐다. 사료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로 만료될 것으로 예정됐던 가운데 축산관련단체와 한국사료협회 등은 사료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영구화'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해 왔다.

한편, 정부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연간 32만ha 수준으로 유지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림기술개발을 통해 가축개량사업을 추진,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키로 했다. ㉞